

분단노동시장하의 노사협상의 정착*

沈 志 鴻**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분단노동시장 |
| II. 노동시장이론 | 1. 계약시장과 분단노동시장 |
| 1. 계약이론 | 2. 노사협상과 정부의 역할 |
| 2. 이중노동시장이론 | IV. 맺는말 |
| 3. 효율성 임금이론 | |

I. 머 리 말

노동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만 간주할 경우에는 실업이나 노사협상에 관한 설명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불완전경쟁시장으로서의 노동시장이 전제된다. 불완전경쟁시장 전제하의 노동시장이론중 계약이론에서는 노사협상에 의해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고, 이중노동시장이론에서는 고임금기업(1차노동시장)과 저임금기업(2차노동시장)이 구분되며, 효율성임금이론에서는 균형임금을 초과하는 고임금이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나온다. 이 세가지 이론은 상호관련없이 독자적으로 연구되었다.

본논문에서는 이 세이론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종래의 이중노동시장이 노사관계를 설명할 수 없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외에도 노사

*이 논문은 1991년도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관계를 반영하는 계약시장이 부가된 분단노동시장이 유도된다. 다시말해서 노동시장을 효율성임금시장, 계약시장, 경쟁시장의 셋으로 차별화시킬 수 있다.

노사협상은 계약시장에서 일어나지만 다른 시장과 무관하지 않으며 특히 효율성임금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계약시장의 노사협상이 잘 성취되어 최선의 解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완전정보의 전제가 충족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비대칭적 정보관계에서 대칭적 정보관계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보의 열세에 있는 노동자측에 대한 정보보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정보전달 내지는 정보보완의 역할을 정부에게 기대할 수 있다.

II. 노동시장이론

1. 계약이론

현실적으로 노사협상에 의한 노동시장의 거래가 상당한 산업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계약을 존립시켜주는 원인을 첫째, 노사간의 공동이윤추구, 둘째, 노사중 적어도 한쪽이 위험기피자, 셋째, 불확실한 경제상태에 관한 정보의 문제라는 계약이론의 세가지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쌍방독점과 계약이론

기존의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상호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 의하여 결정되며,¹⁾ 더욱이 임금은 한 인간위주가 아니라 노동시간위주로 비인격화되어 지불된다.

이에 반해서 계약이론은 경쟁적인 노동시장의 분석을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쌍방독점식 접근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쟁적이란 시장가격으로서의 시간당 임금이

1) 노동수요자인 사용자가 이윤극대를 가져다 주는 노동투입량을 결정하는데서 노동수요가 나오고, 노동공급자인 근로자가 효용극대를 가져다 주는 노동량을 결정하는데서 노동공급이 나오는 것이다. 즉 노동수요는 기업측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노동공급은 노동자측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이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효용수준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노동자의 목적방정식인 효용함수와 사용자의 목적방정식인 이윤함수가 주어질 때, 한편으로는 주어진 효용수준이 보장된다는 제약하에서 사용자의 이윤극대화가 분석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어진 이윤수준을 보장해 준다는 제약하에서 노동자의 효용극대화가 분석된다. 그런데 이 두 분석 방법은 근본적으로 두 목적방정식의 값을 극대화시키는 이른바 공동이윤추구를 목표로 삼는 쌍방독점의 분석방법과 같은 것이다.

(2) 최적계약조건

쌍방독점식 분석방법을 따르는 계약이론에서는 수량변수 뿐만아니라 가격변수도 결정 변수가 되기때문에 최적화의 필요조건은 가격변수인 임금을 결정짓는 필요조건과 수량변수인 노동량을 결정짓는 필요조건으로 이루어지며, 여기서 최적위험배분조건(condition for optimal risk-sharing)과 생산효율성조건(condition for productive efficiency)이 나오게 된다.

최적위험배분조건은 노동자 또는 사용자중 어느 한쪽 혹은 둘다 위험기피자일 때만 나타나며, 임금소득에 대한 한계효용이 경제상태에 무관하게 일정불변이 될 것을 요구한다.²⁾

생산효율성조건은 노동자의 한계대체율과 사용자의 한계대체율이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노동자의 등효용곡선(isoutility curve)과 사용자의 등이윤곡선(isoprofit curve)의 접점에서 충족된다. 이러한 접점의 궤적을 계약선(contract curve)이라 부른다.

(3) 정보의 문제

생산성, 노동수요, 노동공급은 경제상태에 따라 변하며, 노사양측에 의한 경제상태의 인지가 가능한 경우를 公共情報(public information) 또는 완전정보하에, 그리고 노사중 한측이 경제상태에 대한 인지가 불충분할 때를 私的情報(private information) 또는 비대칭정보(asymmetric information)하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공공정보하의 최적계약은 어떤 경제상태가 나타나더라도 이에 부응되는 사전에 협의된 임금및 고용량을 반영시키는 상태조건부계약(state contingent contract)의 형식을 가지게 되지만, 사적정보하에서는, 예를 들어 노동자가 경제상태를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면,

2) 둘 다 위험중립적일 때는 최적위험배분조건이 필요없게 된다.

상태조건부계약이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경우는 상태를 인지한 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약("incentive compatible constraint")하에서 최적계약조건이 유도된다.

(4) 가격이론과의 비교

계약이론은 전노동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노동시장은 쌍방독점시장만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해서 반대로 노동시장을 경쟁시장만으로 볼 수도 없다. 한 기업 내의 노사관계는 쌍방독점시장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다른 기업에서의 임금 수준등이 고려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상호간 또는 산업분야 상호간에는 경쟁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시장은 쌍방독점적 요소와 경쟁적 요소가 섞여있는 시장인 셈이다.

고용수준에 관한 계약이론의 입장은 효율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생산효율성을 내포하고 있는 계약선상을 벗어나게 되면 고용부족 또는 고용초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개념으로 실업 내지는 완전고용을 언급할 수 있는가하는 것은 계약이론과 가격이론의 비교에서 분명해진다.

가격이론의 경우는 효용극대조건에서 노동공급이 그리고 이윤극대조건에서 노동수요가 도출되며,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일치하는 균형점에서 완전고용수준이 결정된다. 그러나 쌍방독점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론의 노동공급곡선은 주어진 단위노동임금에 대한 효용극대점의 궤적으로서 등효용곡선과 단위노동임금의 접점들로 이루어지며, 가격이론의 노동수요곡선은 주어진 단위노동임금에 대한 이윤극대점의 궤적으로서 등이윤곡선과 단위노동임금의 접점들로 이루어진다. 등이윤곡선과 등효용곡선의 접점의 궤적인 계약선은 가격이론의 균형점을 지나가며, 이 균형점을 벗어난 계약선상의 점들은 생산효율성조건을 충족시키는 계약이론의 고용수준이지만 가격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고용이 아니다.³⁾

생산성 변동이 임금 및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가격이론과 계약이론의 두 경우를 구분하여 조사하면: 계약이론보다 가격이론에서 임금변동폭이 더 크며, 반면에 고용량 변동폭은 가격이론보다 계약이론에서 더 크다. 즉 계약을 통하여 임금변동폭을 줄이고 그 대신 고용량 변동폭이 늘어나게 된 셈이다.

3) 예외적인 경우는 餘暇수요의 소득탄력성이 높을 때이다. 이 경우는 수직의 계약선이 나와서 계약선 위의 모든 점들이 같은 고용량을 보여준다.

2.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theory)

Doeringer / Piore는 노동시장을 1차노동시장(primary sector)과 2차노동시장(secondary sector)으로 구분하여 1차노동시장은 우세한 기술과 자본,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에서 제공되는 좋은 직장의 노동시장, 그리고 2차노동시장은 열세한 기술과 자본을 가진 경쟁적 기업에서 제공되는 좋지 못한(혹은 덜 좋은) 직장의 노동시장으로 규정했다. 더 자세히 구분하면, 1차노동시장은 고임금, 안정된 직장, 선호도가 높은 직장, 좋은 노동조건등으로 특징지어지는 반면, 2차노동시장은 저임금, 불안정한 직장, 높은 이직율, 열악한 노동조건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이중노동시장의 존립근거는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 상호간의 노동이동의 제약에서 찾을 수 있다.

3. 효율성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

효율성임금이론은 노동시장의 초과공급하에서라 할지라도 임금하락이 기업에 이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Solow(1979)는 불완전한 노동시장, 생산성과 임금은 정의관계라는 전제하에서 판매량의 제약하에 놓인 사용자가 비용극소를 가져다 주는 임금을 결정짓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업은 비용극소를 가져다 주는 임금, 즉 효율성임금에서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이 나타날지라도 임금을 하락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임금하락이 생산성 저하를 야기시켜 기업의 비용증대 내지는 이윤감소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더욱이 균형임금을 초과하는 높은 임금, 즉 효율성임금으로 근로자의 태만을 감소시키고, 이직을 줄이고, 신규채용 응모자의 평균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업의 이미지 향상, 노조의 역할 감소 등의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효율성임금은 비록 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균형임금을 초과하는 고임금으로 좋은 근로자 및 높은 생산성을 가져 와서 기업의 실적과 이윤이 향상된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원하는 좋은 직장, 그래서 언제나 초과공급상태의 노동시장으로서 바로 이중노동시장의 1차노동시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Ⅲ. 분단노동시장

Akerlof/Yellen(1986)은 효율성임금이 1차노동시장의 존재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며, 2차노동시장에서는 임금과 생산성의 관련성을 찾을 수 없고 신고전파적 균형에 의한 시장청산이 지배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이 청산되는, 즉 완전경쟁의 2차노동시장에는 약간의 불운한 사람들이 종사할 뿐이고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1차노동시장에 속하며, 1차노동시장의 임금은 일률적이 아니지만 모든면에서 2차노동시장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Akerlof/Yellen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견해는 Doeringer/Piore와는 차이가 있다.

1. 계약시장과 분단노동시장

Akerlof/Yellen의 의견에 따르면 “노사협약에 의한 계약시장”⁴⁾은 시장청산이 이루어지는 2차노동시장에 속할 수 없으므로 1차노동시장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반면에 Doeringer/Piore의 이중노동시장 분류에 따른다면 계약시장이 고임금의 안정된 직장보다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직장에 더 가깝거나 또는 1차와 2차 노동시장의 중간에 속할 것이다. 사실 계약시장을 1차 또는 2차노동시장중 어느한쪽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효율성임금의 1차노동시장이나 완전경쟁의 2차노동시장과는 달리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노동시장이 셋으로 분단되어 있으며, 첫째는 효율성임금의 노동시장, 둘째는 경쟁적인 요소와 쌍방독점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 있는 계약시장, 셋째는 언제나 시장청산이 지배하는 경쟁시장이다.⁵⁾

생산성향상에 주력하며 산업의 주도적 역할 및 견인력을 가진 시장은 바로 효율성임금 시장이다. 여기서는 고임금기업의 노동초과공급 내지는 많은 노동자들의 탐색과정(search

4) “노사협약에 의한 계약시장”이란 계약이론이 적용되는 시장이며, 간단히 줄여서 계약시장이라 부르겠음.

5) 원래 이중노동시장을 분단노동시장이라고도 부르지만, 본 논문에서는 1차 및 2차노동시장을 이중노동시장이라 부르고, 노동시장을 셋으로 분류한 경우를 분단노동시장으로 칭하고 있다.

process)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현상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임금시장의 실업자는 결국 계약시장으로 몰려들게 된다. 계약시장에 미치는 효율성임금시장의 파급효과는 수량변수인 고용량뿐만 아니라 가격변수인 임금에도 해당될 것이다. 즉 효율성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효율성임금시장의 초과공급의 증가는 계약시장의 임금교섭 및 고용량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계약시장은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노동시장으로서 고임금기업부터 저임금기업까지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루어 질 때 산업분야 및 사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합리적인 노사관계란 노사양측의 힘겨루기나 세력다툼이 아니라 계약이론에서 말하는 최적계약조건인 효율성조건과 형평의 조건⁶⁾에 따라 고용량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경쟁시장은 효율성임금시장이나 계약시장에 비해 극히 미세하며, 쉬운 예로 일일근로자의 수급시장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시장의 균형가격이 효율성임금시장이나 계약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것이며, 역으로 효율성임금시장으로부터 영향력이 계약시장을 거쳐 경쟁시장까지 미칠 것이다.

지난 '92년 봄 우리사회는 고임금하의 인력난 문제로 떠들썩했다. 신고전파적 완전경쟁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고임금과 인력난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즉 고임금이면 초과공급이 나오며, 인력난이면 초과수요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분단노동시장의 시각으로 보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고임금은 효율성임금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이며, 인력난은 계약시장중에서도 저임금부문에서 발생한 것이다. 분단노동시장 상호간에는 노동이동의 제약이 따른다는 특성때문에 어느정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난 봄에는 상황이 좀 극단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이후에 단기적 적응기간을 지나 지금은 이 문제가 고비를 넘긴 것을 알 수 있다.

2. 노사협상과 정부의 역할

계약이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시장의 노사협상이 잘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문제가 중요하다. 경제상태를 私의정보로 보는가 또는 公共정보로 보는가의 구분은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지만, 중요한 경제상태를 노동자측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적정보가 단기적으로는 지배적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가 시간의 호

6) 최적위험배분조건을 형평의 조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틈과 함께 나중에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비록 지난일 이지만 뒤늦게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우기 이를 장래의 기대형성에 대한 정보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완전정보가 실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밖에도 사적정보하에서는 최선의 解 대신에 차선의 解에 도달하는 반면 완전정보하에서는 최선의 解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완전정보의 실현 내지는 정보의 중립화를 위하여 정보를 적게 가진 측, 즉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정보의 보완 내지는 전달이 필요하다. 노동자측에 대한 정보의 보완문제는 勞, 使, 政府, 學界 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함께 노력해야 하겠지만, 체계적이고 객관적, 총괄적인 정보는 정부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정부는 노동자측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줌으로써 노동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측의 불필요한 과격행위나 오해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므로 사용자측의 신뢰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勞와 使의 가운데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안정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정보의 전달을 통한 완전정보의 실현이다.

노사간의 합의사항은 다음 협상때까지는 지켜져야 하는데 노조지도부에 대한 불신 탓으로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노조내에서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 자신들의 신뢰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나 안정된 노사관계를 빠른 시일내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측이나 정부에서도 함께 도와야 할 것이다. 특히 신뢰받을 수 있는 노조결성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기본급, 여러가지 수당, 상여금등으로 나뉘지는 복잡한 임금관행을 단순화시킨 총액임금제의 도입은 계약이론적 시각에서 볼 때 정부의 역할의 좋은 예로 들 수 있다.⁷⁾ 또한 고임금 계층의 총액기준 임금인상폭을 제한함으로써 계약시장에 미치게 될 과급효과를 줄이고, 반면에 기타근로자는 생산성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섭하도록 권장한 것도 좋은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화폐임금인상 대신에 성과배분, 복지증진으로 실질소득을 보전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정부측의 행위⁸⁾는 상당히 애매하여 오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데 있어서 화폐임금인상과 복지증진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더우기 사용자측에서 보면 둘다 비용증가를 의미하는데…….

7) 총액임금으로 산업별 및 기업별 임금비교가 가능함.

8) 노동뉴스, 노동부/제 57호. 1992. 11. 16. 제 2권 제 26호.

IV. 맺는말

노사협상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불완전 경쟁시장의 노동시장이론중에서 계약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효율성임금이론을 간단히 소개한 뒤, 효율성 임금이론이 계약이론과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는 점을 이중노동시장이론과 관련지어 비교 연구하였다. 그 결과 효율성임금시장, 계약시장, 경쟁시장의 셋으로 분단되는 노동시장을 제시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안정된 노사협상의 정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노동자측에 대한 정보의 전달, 신뢰받는 노조결정, 임금관행의 일원화 유도, 고임금계층의 임금인상제약등에서 찾아보았다. 이 중에서도 정보의 전달을 통한 완전정보의 실현이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에 해당될 것이다.

사실상 노사협상 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등 여러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단순한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분단노동시장, 계약시장, 정보의 문제, 정부의 역할을 차례대로 연관지어 분석 설명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사협상의 정착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보여주고자 시도되었다.

참 고 문 헌

- 노동뉴스, 노동부/제 57호, 1992. 11. 16. 제2권 제 26호.
- 심지홍, 계약이론과 가격이론의 관계, 단국대학교 논문집 제 24집, 1990. 367-385
- 이주호, 한국의 이중노동시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1992년도 상반기 연구발표회 논문집.
- Akerlof, G. A./Yellen, J. L., eds., *Efficiency Wage Models of the Labor Mark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 Doeringer, P. B./Piore, M. J., Unemployment and the Dual Labor Market, in: J. E. King, ed., *Readings in Labour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420-430
- Green, J./Kahn, C. M., Wage-Employment Contrac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8, Supplement, 1983, 173-187
- Hall, R. E./Lilien, D. M., Efficient Wage Bargains under Uncertain Supply and Demand, *American Economic Review*, 1979, 868-879
- Kahn, C./Scheinkman, J., Optimal Employment Contracts with Bankruptcy Constraint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85, 343–365

Rebitzer, J. M., Efficiency Wages and Implicit Contracts: An Institutional Evaluation, in: R. Drago/R. Perlman, eds., *Microeconomic Issues in Labour Economics*. Harvester Wheatsheaf, 1989, 16–40

Rosen, S., Implicit Contracts: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85, 1144–1175

Solow, R. M., Another Possible Source of Wage Stickiness, *Journal of Macroeconomics*, 1979, Vol. 1, 79–82